



들어가기



교육목표

- 1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체벌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3 사생활보호와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4 차별의 이유, 종류, 문제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5 표현의 자유 및 아동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교육내용

- 1차시 권리주체이자 의무이행자, 아동
- 2차시 폭력으로 보호받을 권리
- 3차시 자기결정권
- 4차시 비차별 문화 조성
- 5차시 아동참여와 시민권



용어해설

※ 용어설명은 인권교육 기본용어의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2020)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조치의 범위는 가정,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의 모든 환 경에 해당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모욕감을 주거나 조롱하거나 위협을 하는 등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도 아 동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호, 13호)

인권교육 기본용어(국가인권위원회 2020), 270쪽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라고 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는 신체적 접촉 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접촉 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급 또는 성적 인 행위에 대한 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성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 가능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성 적학대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착취는 일반적으로 돈이든 호 감이나 관심이든 어떤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 행위에 관여하 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교육 기본용어(국가인권위원회 2020), 272쪽



학습하기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이 교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사이버 인권교육으로 제공되는 '인권이란(중학교)'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 및 사례를 통해 인권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유용합니다. 교육센터의 영상 콘텐츠와 함께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

권리주체이자 의무이행자, 아동

- 인권의 의미와 권리주체이자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시다.



생각해보기

인종 차별, 장애인 차별, 성 차별, 나이 차별 등 우리의 일상 속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런 다양한 차별 사례를 다루게 됩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차별이 가장 심한 것 같은지 물었는데 한 학생이 책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차별 당하는 것만 나왔지만 어려서 차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교사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이가 어려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자 여러 학생들이 자신들의 차별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생 1 : " 친구랑 문구점에 갔는데 다른 어른들한테는 아무 말 안하고 저희한테만 물건 빨리 고르라고 짜증을 냈어요. "

학생 2 : " 편의점에 엄마랑 같이 갔을 때 물건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친구랑 가서 물건을 살짝 떨어뜨렸을 때는 화를 내면서 혼내셨어요. "

학생 3 : " 경비 아저씨가 어른들한테는 친절하게 대답해주면서 우리가 물어보면 귀찮아 하면서 말해요. "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지 못한 다양한 아동 차별이 발생되며, 성인들이 무심코 던지는 한 마디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사례와 비슷한 아동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천부적 인권을 지닌 사회의 시민이자 구성원이며, 한 명의 권리 주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인과 동등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주체이자 의무이행자인 아동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의 의미



인권이란?

사람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권리이자 성별, 장애, 국가, 종교 상관없이 누구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권은 시대가 변화하며 세대별로 그 권리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아동도 이러한 모든 인권의 영역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은 미숙한 존재, 성인의 축소판, 부모의 소유물로만 여겨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권리의 주체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 권리이행이자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국제협약이며, 시민·정치적 권리(1세대 인권)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세대 인권)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숫자로 알아볼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18, 4, 54, 1989, 1991, 196의 숫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숫자는 18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숫자 18은 아동의 연령을 의미합니다. 보통 12살, 13살을 아동이라 인식하지만 '18살 미만의 모든 사람'이 아동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숫자는 4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숫자 4는 아동의 기본권을 나타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4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의 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 이 4가지 일반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숫자 54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 수를 나타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숫자는 1989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숫자 1989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 연도를 나타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전 세계가 18세 미만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함께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숫자는 1991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숫자 1991은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연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 해당 인권협약을 비준하여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숫자는 196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숫자 196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국가 수를 나타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9개의 인권협약 중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국제협약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듯 아동도 권리의 주체로서 마땅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아동인권은 어떨까요? 어른들이 무심코 던지는 한 마디에도 아동들은 자신이 존중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행동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너의 의견은 어때? 이렇게 바뀌서 말해주세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동은 인격적 존재로, 권리의 주체자로 존중 받는 경험을 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으로서의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이는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우,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의 순으로 총 7개의 시도에서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눈치를 봐야 하거나 학교 교칙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여전히 일상적으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존중 받을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학생인권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평등한 대화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리주체와 의무이행



권리주체란?

참여를 통해 자신의 온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의무이행자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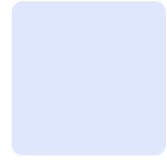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권리주체이자 의무이행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주체임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을 가진 의무이행자이기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 이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인 의무이행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1차적 책임은 국가와 보호자이지만, 아동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보호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교사,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도 권리 주체자인 동시에 의무이행자로서 주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들끼리도, 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는 나와 내 친구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보호자, 교사 등 성인 의무이행자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아동과 성인 모두, 서로의 권리가 최대한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국제협약이며, 시민·정치적 권리(1세대 인권)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세대 인권)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권리

해설:

Q2

권리주체이자 의무이행자로서 우리들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2차시 | 폭력으로 보호받을 권리

- 체벌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각해보기

중학교 교사 A 씨는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자꾸 늦는 학생들을 불러 오리걸음과 팔굽혀펴기 10회의 체벌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B 씨는 일부 반 학생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하였는데요. 반성문을 쓴 학생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반성문 제도와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교실 뒷문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

이를 본 담임교사 B 씨는 C 학생에게 지각과 교실 뒷문을 발로 찬 행위에 관련해 다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C의 반성문에는 '자살각'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담임교사 B가 학생 C를 지도하던 과정 중 추가 자해가 일어나면서 학생 C의 보호자는 교사 A 씨와 B 씨를 인권위에 진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체벌이 금지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동들은 수많은 안 좋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벌에 대한 인식과 체벌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벌이란



체벌이란?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제재로서,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체벌에는 도구나 손, 발 등으로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직접체벌'과 벌을 주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모멸감을 제공하는 '간접체벌'로 나뉩니다.

교내 체벌은 현행법상 불법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체벌이 불법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가정 내 체벌도 금지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011년 3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체벌을 부분적으로 금지하여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내 체벌은 줄어들었을까요?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교내 체벌 현황

체벌 관련 결과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가끔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초등학생	신체에 대한 폭력	83.1%	11.5%	3.8%	1.1%
	간접체벌	81.7%	12.0%	4.4%	1.3%
중학생	신체에 대한 폭력	71.4%	20.1%	7.3%	1.1%
	간접체벌	58.0%	21.0%	14.4%	6.6%
고등학생	신체에 대한 폭력	78.0%	17.1%	4.3%	0.7%
	간접체벌	72.6%	17.4%	8.6%	2.3%

하지만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초,중,고 학생들은 여전히 체벌을 받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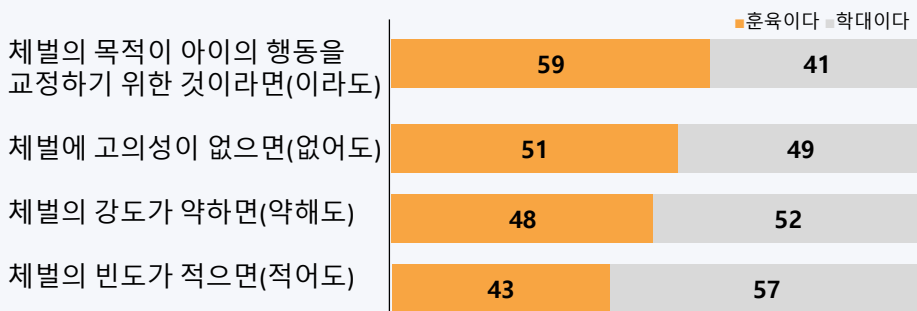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체벌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은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최소한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그 어떤 신체적·물리적인 고통도 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인의 교내 체벌에 대한 찬반 인식 현황





체벌에 대한 인식

이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점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에서 정부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모든 체벌은 폭력이고 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체벌을 행하는 데에 여전히 여러가지 허용사유가 존재하지만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맞아도 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벼운 체벌도 폭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체벌 없는 학교문화

체벌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교사 모두 권리주체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학교의 A 교사는 수업 중에 방해되는 학생 B를 교실 뒤쪽에 세워두었다가 '정서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 당했습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정서적 학대 소지도 있어 허용되는 생활지도수단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교사는 학생 훈육에 관한 학교 규정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관할 교육청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교권침해는 최근 3년간 6,128건에 해당하며 연 평균 2000건으로 주 10회 이상 경험(36% 이상)하거나 모욕/명예훼손(56%)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만큼, 교권 또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은 나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장받을 권리의 주체이자, 동시에 교육공동체인 학교 내 구성원으로서 나와 다른 친구의 학습권, 선생님의 교권을 서로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폭력 의사소통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은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요', '몰라요', '싫어요', 대신 솔직한 나의 생각과 욕구, 감정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는 자신의 욕구가 강한 아이를 억누르기 보다 아이의 생각과 욕구를 물어봐 주면서 '나는 힘 대신 다른 방법으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주체로서 자기결정권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정하여 아동들이 학교 내에서도 권리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을 '학교 또는 학습규칙'으로 정하고 교사와 아동 모두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 중시하는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공교육에서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하는지,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학력과 공부 외에도 연대의식과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유대감이 높아지고, 시민정신을 함양해 아동들이 스스로 매너를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해주어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방관하기보다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제재조치를 하거나 소규모 수업으로 구조 및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른 학생의 수업받을 권리를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 조치,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타임아웃을 실시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각 분리조치하고 싱가포르에서도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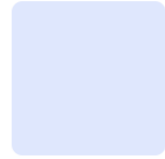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

어린시절 체벌을 경험한 집단이 체벌에 보다 관대하고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체벌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교적 허용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자 아동인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누구보다 앞장서야겠습니다.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8항에서는 직접 체벌 뿐 아니라 간접 체벌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o x)

정답: x

해설: 이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Q2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의 경우,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3차시 | 자기결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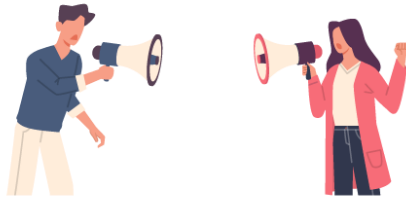
- 사생활 보호와 휴대전화 사용,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생각해보기

학생 1 : "제가 해야 할 일이나 진로를 부모님이 마음대로 정해요."

학생 2 : "위치 추적 앱과 휴대전화 관리 앱 때문에 감시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나의 일상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사생활을 지켜주지 않은 경험이 있나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이러한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휴대전화를 통제하는 것, 방에서 물건을 살피는 것에 대해 쉽게 싫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와 휴대전화 사용, 자기결정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보호권 vs 자기결정권

아동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물건을 살펴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모들은 '걱정이 된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간섭과 통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생활은 안전과 보호의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의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나만의 공간, 하는 일, 통신상의 대화 등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일을 부모의 기준에서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동에게 득이 아닌 실입니다.

가정 내 지나친 보호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의 사적인 물품을 부모가 관리·감독함으로써, 아동은 보호자가 믿어주지 않고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는 아동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친구관계, 휴대전화 사용 조절, 학습계획 등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을 방해하여 아동 스스로 주체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일을 책임지고 계획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보호자가 금지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은 '나쁘다'는 인식이 생겨, 아동이 오히려 보호자와 열어놓고 상의하지 못하여 숨기게 되거나, 성인의 감시가 없는 곳에서 행동하여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자기결정권



이처럼 가정에서도 충돌되는 아동의 보호권과 자기결정권이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학교 모든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고, 벌점을 받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선도부 학생들을 동원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학생들의 가방, 사물함, 책상, 몸 등을 검사하여 휴대전화 및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한 학생들을 적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정당한 걸까요? 안전의 문제가 있을 시 제한 받을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시행한 점, 개인의 물품을 동의 없이 열람한 점은 인권을 침해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할거라 예측되거나 해당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고 검사장소, 검사자, 검사방법을 고려해 해당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제한을 가하더라도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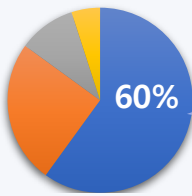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은 어떨까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자율권 논란과 찬반 논란이 보다 심하게 지속되는 부분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현황을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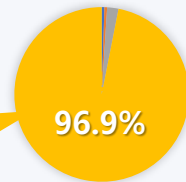
2007년부터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가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원 대상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현황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2009)

“학교 내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을 반대한다”(2017)



2020년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중학생 75.9%



고등학생 47.2%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한다” (2020)

출처: ‘서울학생인권실태조사(2020)’/ 서울시교육청,국제아동인권센터

또한,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은 5년간 50여건에 달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 라면서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학교가 20%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선생님과 “시계만 봤다”, “전원은 꺼뒀다”고 항변하는 학생의 실랑이가 교실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제한하고 지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해 하교 시 나누어주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센터의 한 활동가는 직장인의 업무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영화관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들의 휴대전화사용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통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 만들기

학생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온전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아동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학교는 다수의 아동이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하는 공동의 공간으로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충돌할 때, 이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영국에서는 2013년부터 일부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방식을 채택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와 이용 사항은 학교규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정경대학연구에 따르면,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 도입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향상되었으며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두 배 정도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2017년 기준 전체 스웨덴 중등학교의 60%에 해당하는 631개 학교가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9년, 한 보고서에서는 학업 성취의 증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스웨덴은 오래 전부터 PC와 태블릿을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일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져오더라도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휴식시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S고등학교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규정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은 수업 타종을 기준으로 시작종이 울린 후부터 끝종이 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진동 또는 알림음이 울린 경우를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여, 학년별 누적 위반 횟수를 계산해 해당 학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정기간 일괄 수거하기로 정했는데요. 학생들이 참여해 스스로 만든 규칙이라 그런지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행동자유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대부분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사적인 물품을 강제로 압수, 금지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통제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사회를 구성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 서로 간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육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예절이나 에티켓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D일보와 인터뷰했던 한 아동P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대부분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동의 행동자유권을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사적인 물품을 압수하거나 사전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성인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행동이나 이야기일지라도, 민감한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으며 부모에 의해 감시받고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통해,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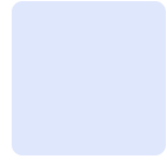
한 인격체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사적인 고유영역을 지키며 사는 것은, 인권을 가진 한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유결정권을 가진 한 인간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아동이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에 대한 경계선을 정하고 가치판단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동은 보호자, 교사, 그리고 주변 성인과 상의하여 스스로 규칙을 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Q2

교내 휴대전화 허용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정한다면 어떠한 것이 좋을지 토론해봅시다.

4차시

인권친화적인 학교환경 구성2_비차별

- 차별의 이유, 종류, 문제점과 비차별문화 조성 노력에 대해 알아보시다.



생각해보기



학생 1 : " 저희 학교는 학년 별 성적순으로 독서실 지정석을 만들어 놓았어요. 50등까지의 학생과 51등 이후의 학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해 갈라놓았어요."

학생 2 : "저희들은 이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등부터 50등은 '알짜배기' 라고 부르고, 51등부터 100등은 '예비인력'. 그리고 100등 밖의 학생은 '잉여'라고 부르며 나누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는 의도치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기회를 잃고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에 많은 불평등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차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차별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출신국가 및 지역, 혼인 및 임신여부 등의 사유로 다음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용 부분, 교육 부분, 업무 부분, 그 외 부분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등의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차별의 이유와 종류

아동들은 어떤 이유로 차별을 당한 걸까요?

아동A: 어른들과 이야기하려다 제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자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동B: 휠체어를 타는 제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다가 엘리베이터가 좁아 함께 타지 못한 적이 있어요.

아동C: 저희 부모님은 미등록체류 노동자세요. 제가 학교에 가면 엄마, 아빠의 신분이 드러나 한국에서 쫓겨나 일을 못하게 될까 봐 저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앞의 이야기에서 나이 차별, 장애유무의 차별, 출신 국가의 차별을 이야기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그 외의 차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별의 이유와 종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인종 및 민족, 범죄전과, 성적지향, 학력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모든 인간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모든 인간은 비차별적인 사회에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차별의 종류를 알아보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첫 번째는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중·고생의 78.7%가 학교생활지도가 성차별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남,여학생 모두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강조하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남학생은 남자라는 이유로 힘든 일을 더 시키는 거나 남녀 다툼에서도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것, 여자는 머리가 짧아도 되지만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되는 점 등을 대표적인 성차별로 꼽았습니다.

여학생은 여자만 불편한 치마를 입는 것, 화장하는 남학생에게는 관대한 것, 교과서에 등장하는 남자는 전문적으로 보이는 넥타이를 한 복장이지만 여자는 앞치마를 맨 경우가 많은 것 등을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두 번째는 '다문화로 인한 차별'입니다. 문화적 배경, 신분, 출신국가나 지역에 의한 차별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학교생활 내내 놀림을 받거나 구타를 당하기도 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름을 다문화로 부르며 차별을 하는 교사도 있다고 하구요.

이러한 학생들은 피해의식으로 성인이 되어도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세 번째는 성적차별 등의 '기회제공의 차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농어촌이나 도시처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휠체어가 필요한 지체·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학교에서 진행한 1박2일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성적으로 인해 의사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제한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추천으로 학생회장이 되었지만, 학생회 임원 자격 조건은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탈락된 경우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차별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차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학교에서는 이렇게 별의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을 해결할 개인적, 국가적인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차별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언어감수성 키우기'입니다. 언어감수성이란 상대방을 위해 언어를 민감하게 살피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혐오나 차별적인 표현을 줄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언어감수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럼 언어감수성은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모르고 사용하는 혐오적 표현을 인식하여 바꾸고, 장애, 나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혐오적인 표현 인식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 소득 수준의 차이를 '거지'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거나, 벌레 '충'을 붙여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이러한 말들이 구석구석 퍼져있는데, 대부분 정확한 뜻이나 의미를 모르고 주변에서 사용하니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르고 사용하는 이러한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 자각, 인식하여 바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장애를 딛고', '장애를 앓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장애는 일시적인 질병과는 달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으로, 즉, 뛰어넘는다고 극복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헬린이", "주린이" 가 있습니다. 수많은 '-린이'라는 말에는 '어린이는 미숙하다.', '어린이는 불완전한 존재다.' 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이 표현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지금,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일문화,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는 유독 다문화에 대한 용어를 특정화하는 현상이 심합니다.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이라는 뜻이므로, '다문화' 용어 자체로 선입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의 사례들처럼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차별적인 시선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물리적인 환경에서부터 차별적인 부분을 없애 나간다면 차별적인 인식과 언어 표현도 차츰 개선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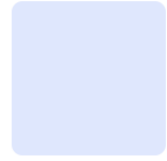
남아들은 1번, 여아들은 50번부터 시작된 출석번호를 성별과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매기는 것, 화장실 표지판을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이 아닌 모두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환경은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시각장애, 신체장애 등 장애가 있는 사람도 모든 곳에 스스로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간이 많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촉구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을 통해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학교 내 성적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보육시설, 교육 등의 국가서비스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등 차별 금지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차별의 이유와 종류는 다양합니다.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Q2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 상황을 살펴보고,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와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토론해봅시다.

5차시 | 아동참여와 시민권

- 표현의 자유와 시민으로서 참여권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알아보시다.



생각해보기



과거, 많은 학생들이 모여 두발 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지막 바리깡(전기이발기)'이라고 쓰인 상자에 넣는 퍼포먼스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학생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두발자유화를 공약으로 삼았더니 교장선생님이 따로 불러 공약을 새로 만들라고 했다"며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현실이 매우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개성을 존중받길 원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걸 즐기는 MZ세대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40년 전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및 아동의견 존중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의 두발, 복장 규정 수준은 3-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18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두발자유화를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이후에도 수 많은 찬반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중고등학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발간된 학생인권공동사례집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용모규제에 대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서울시 31개 학교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는 학칙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인권위는 '해당학칙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은 복장, 두발 등의 용모에 대해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강제력'이 없으며, 아동들조차 '무엇이 조례에 어긋나는 과한 조치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반해 강제적으로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인격적인 자율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동들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칙을 개정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및 아동의견 존중

학생이 교내외에서 모임을 구성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학교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는 학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단체인 경우,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모임의 결성,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집단적 행위 등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의 자치모임은 학교마다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동참여 중요성



아동참여란?

아동이 삶의 주체가 되어 아동의 삶과 관련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의견을 표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것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최우선의 이익과 아동참여가 핵심 기본원칙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아동 당사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참여와 아동참여권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참여권 보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동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레타 툰베리가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10대의 스웨덴 환경운동가입니다. 툰베리는 특별한 사람이자, 영웅이라 가능했을까요?



아동참여 중요성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우리 주변 일상에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아동참여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멋진 영웅들이 많습니다.

2019년 국내 아동들은 경쟁적인 입시문화,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아동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가권을 보장하고,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동들은 '어른들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공부한다' 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러한 아동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지나친 사교육과 경쟁적인 입시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별한 아동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동인 여러분이 겪는 일상에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은 없는지,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 가정과 학교 사회가 보다 아동권을 존중하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해 아동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동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자로서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기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지 않으며, 진정한 아동주도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보다 어른이 주도하는 활동에 아동이 동원되거나 또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아직까지도 아동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역량 강화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의견 청취를 위한 실질적 제도 조성 및 아동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동참여 중요성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배움터로서 사회수업, 정치수업에서부터 아동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통일 이후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997년 크릭 보고서(Crick's Report)를 기반으로 중등교육에서 '시민과목 (Citizenship Education)'을 필수화 했습니다. 차브(chav) 계층을 중심으로 각종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 무관심이 심화됨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민과목은 사회·도덕적 책임감과 지역사회 참여, 정치적 소양 세 가지를 강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운동을 위해 사회과 국가교육과정(NCSS)에 주요 목표로 포함했으며, '시민(Civics)', '사회과목(Social Studies)' 등 교과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참여권 및 역량 강화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없는지, 내 주변 친구 중에 출신국가, 신분,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등으로 차별 받는 친구는 없는지, 학교에서 아동이 이용하는 화장실만 더 좁고 불편하진 않은지 등 내가 누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아동의 눈높이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아동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찾아 여러분의 의견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변화시켜야 하는데요.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학교 교칙 설정 시 의견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차별적인 제도 개선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고,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참여권 및 역량 강화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이자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의견을 내고, 학교는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고려하여야 하며, 아동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재개발이 이뤄지면 아동들의 통학로가 위험해져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 어른들을 위한 주차장,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은 만들어지지만, 아동들이 축구하고 함께 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놀이터, 문화센터는 사라지면서 아동의 놀권리와 문화/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아동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른들, 지역사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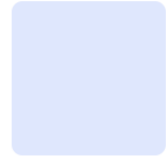


그럼 내 의견은 어디에 제시해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에는 아동참여예산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느꼈던 일, 여러분의 일상에 더 필요하고 도움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 주변의 일상을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의견을 내고 직접 참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행동으로, 나와 내 친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대중들에게 본인의 목소리를 낸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Q2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불편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학습정리

1차시 권리주체이자 의무이행자,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국제협약이며, 시민·정치적 권리(1세대 인권)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2세대 인권)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2차시 폭력으로 보호받을 권리

- 체벌을 행하는 데에 여전히 여러가지 허용사유가 존재하지만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맞아도 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벼운 체벌도 폭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3차시 자기결정권

- 학교는 다수의 아동이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하는 공동의 공간으로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습정리



4차시 비차별 문화 조성

-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 속의 차별적인 시선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혐오나 차별적인 표현을 줄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차시 아동참여와 시민권

- 아동 당사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